

성범죄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책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작년에 이어 두번째 공동 개최

● 언론중재위원회는 6월 20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상조, 이하 ‘로스쿨’)과 공동으로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실제 조정신청된 사건을 바탕으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위원회 실무자와 서울대 로스쿨 학생 간의 찬반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 1세션에서는 성범죄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보도에서는 피해자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했는데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속해있는 단체에 그 가명을 가진 실명자가 있었고 해당 가명자가 언론 조정 신청을 한 사안이 었다. 토론자들은 가명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성추행 피해자로 오인될 수 있어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도에서 ‘가명’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본다며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 2세션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양 당사자가 결정과는 다르게 별도로 이면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면합의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집행 및 기관력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중재부의 판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 권 성 위원장은 토론회 총평에서 “실제 언론보도 분쟁 사건에 대해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언론보도와 인격권에 관한 학문적 관점을 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주제는 일도양단식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중용’의 가르침을 가치에 둔다면 적절한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로스쿨생, 교수, 언론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원장